

민주노총 4월 24일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자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박근혜가 해고는 더 쉽게, 임금은 더 낮게, 비정규직은 더 늘리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려 하기 때문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정부의 반(反)노동자 공세에 맞서 더 강력한 투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연말 민주노총 첫 임원 직접선거에서 총파업 공약을 내건 한상균 위원장을 선택했다. 이제 4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조합원들의 열망을 실현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총파업이란 여러 부문의 노동자들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다.

4월 총파업이 '무늬만 총파업'이 되지 않으려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동시에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와야 한다. 여기에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선두에 서자. 건설 현장을 멈추고 서울로 상경해 위력적인 힘을 보여 주자.

박근혜는 악랄하지만 천하무적은 아니다. 지지율이 고꾸라지며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그의 오른팔 김기춘이 사임했다.

우리는 박근혜 취임 이후 가장 싸우기 좋고 유리한 때를 맞고 있다. 이럴 때 총파업에 나서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 우리가 단호하게 싸운다면 박근혜에 반대하는 대중의 광범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왜 4월 총파업이 건설 노동자들에게 중요한가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은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기선을 제압하자는 취지다. 많은 조합원들이 알듯이, 국회에서 망치 두드리고 나서 싸우는 건 뒤늦다.

이것은 건설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지난해 7월 22일 건설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시늉을 했다. 하지만 파업이 끝난 후 정부는 시간을 끌었고, 결국 기업들의 편을 드는 꼼수를 부렸다. 지금 정부는 수급조절위원회 폐지를 추진하는 등 건설 노동자들을 향해서도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올해도 정부 부처들은 꼼수를 부리며 건설 노동자들을 기만하려 할 것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건설 노동자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요구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세월호 정국에서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사고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체불임금은 노동자들을 절망으로 밀어 넣고 있다.

4월 총파업은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과 함께 건설부문의 요구도 같이 내걸고 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실질적인 총파업이 되도록 현장 활동가들이 나서자

이용대 건설연맹 위원장은 2월 25일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식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4월 총파업에 앞장서 복무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건설 노동자들의 염원인 안전한 건설현장, 체불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선두에서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결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건설노조 내 전투적인 활동가들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

구경북건설지부는 이미 1월부터 4월 총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조합원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모범을 확산해야 한다.

활동가들은 자신의 현장에서 조합원들에게 4월 총파업의 취지를 알리고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총파업 성사를 위해 민주노총이 모집하고 있는 '총파업 실천단'에도 적극 참가해 지금부터 총파업의 기세를 끌어올리자!

이간질해 각개격파하려는 박근혜 — 노동자의 무기는 총단결이다

박근혜 정부가 연말연시에 쏟아낸 정책들은 우리 노동자들을 향한 전면전 선포이다.

박근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노동 공세는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박근혜는 장기 불황의 고통을 집요하게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한다.

임금체계 개악,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공무원연금 개악 등은 서로 다른 부문의 노동자를 겨누는 듯하지만, 경제 위기 고통전가라는 하나의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다.

이 목표 하에서 정부는 계속 건설기업을 편들고 있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안전한 현장, 불법 다단계하도급 근절, 체불 근절, 노동강도를 낮춰 일자리를 늘리기 등에 쉽사리 양보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단일한 투쟁 전선에서 힘을 모아 맞서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부가 이런 공격을 밀어붙이는 데 사활을 거는 만큼, 우리 편도 이에 상응하는 단호함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는 노동자 계급 내부의 상이한 부문들을 서로 이간질해 각개격파하려 한다. 정규직은 “과보호”로, 공공부문은 “철밥통”으로 비난하는 이유다.

이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노동자 단결 투쟁이 중요하다. 한 부문에 대한 공격을 모른 척하면, 그 다음 차례는 바로 내가 된다. 각 개격파 당해 힘이 약화되기 전에 함께 싸워야 한다.

“단결”, “연대”는 공자님 말씀이 아니다. 노동자 승리의 유일한 길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는 우리 모두의 과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는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의 핵심 요구 중 하나다. 공무원연금을 받지 않는 나머지 조합원들이 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함께 투쟁해야 하는가?

첫째,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 개악의 포문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를 디딤돌 삼아 우리의 노후자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을 개악하려 한다.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불안한 노후도 더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부문 단협 개악 등 공공부문 공격을 우선 성공시켜서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려 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데 성공하면, 민간 기업주들이 민간부문 노동자들을 쥐어짜기가 더 쉬워진다.

이렇게 되면, 건설회사들은 공공·민간 부문의 건

설현장 모두에서 노동강도를 더 강화하려 시도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부의 집중포화가 우선 쏟아질 그곳에 함께 힘을 모아 반노동 공세를 막아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금과 노동조건을 지키는 것은 민간 부문의 노동조건 후퇴 압박을 막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불안, 저임금 해결 위해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정부와 사장들에 맞서자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 건설부문의 일자리가 줄어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됐다.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조건은 정부와 건설회사 탓이다. 건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산재, 임금 체불에 시달린다.

건설 자본가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끊임 없이 고용 불안을 만들어 낸다. 또, 이주노동자들을 더 나쁜 노동조건으로 고용해 건설 현장의 전반적 노동조건을 열악한 수준에서 묶어두려 한다.

그러다 보니 일부 내국인 조합원들은 이주노동자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낮춘다고 반감을 품는다.

최근 건설노조에서 이주노동자 “불법고용” 해결 요구가 등장했다. 건설 자본가들의 이주노동자 “불법 고용”이라는 약점을 잡아 내국인 조합원 일자리를 확보하려는 전술인데, 이것으로 건설 현장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이주노동자들이 등 돌리게 하는 전술로는 얼마 안

가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무엇보다 자본가들은 두 집단 사이를 이간질해 더욱 분열시키려 할 것이다.

대구경북건설지부는 이주노동자 배척 사업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비조합원 모두의 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투쟁해 좋은 성과를 낸 바 있다.

최근 조직이 확대되고 있는 토목건축분과에서 이 기세를 몰아 이주노동자도 조직해 함께 투쟁을 벌인다면 현장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